

# 에너지전환연구회 2020년 제2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개최계획(안)

- 정의로운 전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현황과 과제 -

## 1. 목적

- 충남연구원 에너지전환연구회는 에너지전환 및 지역에너지체계 분야 연구자간 관련 정보·지식의 공유하고 에너지전환 및 지역에너지체계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조사하여 도 및 시·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구성되었음
- 에너지전환연구회는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함께 충남에너지전환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2020년 제2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 2.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20년 4월 17일(목) 14:00~16:00
- 장 소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
- 참석자 : 충남도의회, 충남연구원,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 3. 진행 순서

구분	시간	소요 시간	내용	발표·토론자
개회	14:00~14:10	10분	행사 개요 및 참석자 소개	박기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발표	14:10~14:40	30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사업) 현황과 문제점	조재준 박사 (퍼포먼스웨이 컨설팅)
토론	14:40~12:00	80분	-홍녕돈 대표(서천사랑시민모임) -김은수 사무국장(보령참여자치연대) -이정일 소장(태안자치연구소)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연구원	좌장: 안장헌 충남도의원

※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발표·토론자 위주의 내부 포럼(비공개) 형태로 진행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 04. 07

조재준 (단국대학교)

# 목 차

1. 서론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
3. 주민의 수요 및 인식 분석
4. 개선방안

# 1. 서론

-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그 주변지역 주민이 상대적으로 환경, 건강권 및 재산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사업 수행을 원활히 도모하고자 발전소로부터 일정거리(5km이내)에 있는 주변지역이 입는 불이익을 보상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제정 이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시행과정과 결과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지원사업에 대한 낮은 수준의 주민만족도
  - 선정 가능한 사업의 고갈
  - 지역안배식 소규모 사업 추진 등에 따른 효율성 저하
  - 발전소 폐쇄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기반의 미흡

##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누가 : 정부(산업부)가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지자체장**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위임(민간위탁)
- 왜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 지역발전
- 언제 : 발전소 건설기간중(한시적) 또는 가동기간중(매년)
- 무엇을 : **공공·사회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 □ 발전소주변지역의 정의

- 원자력·화력발전소 :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

#### \* 수력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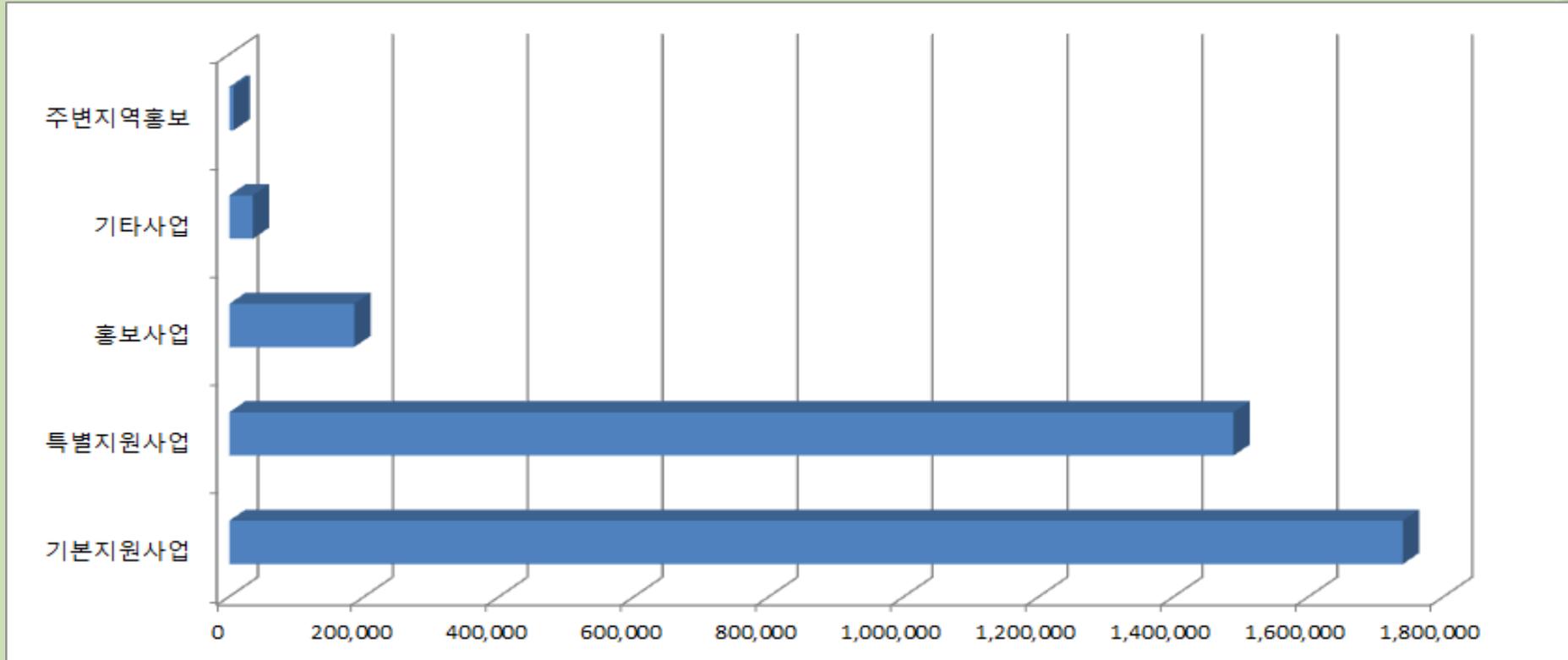
- (댐상류)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 (댐상류 外)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육지 및 섬지역

##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 기본지원사업 : 소득증대, 공공시설, 육영, 전기요금보조, 주민복지, 기업유치
-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 건설 예정지에 대한 지원사업
- 홍보사업
- 기타 사업 : 연구, 조사사업
- 사업자 지원사업 :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장학사업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 등

# 사업종류별 지원내역(1991-2016)



- 기본 지원사업이 약 1조7000억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됨
- 특별 지원사업으로 약 1조 4000억원이 지원됨

##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지자체장 시행)

구분	내용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공공시설사업	●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발전사업자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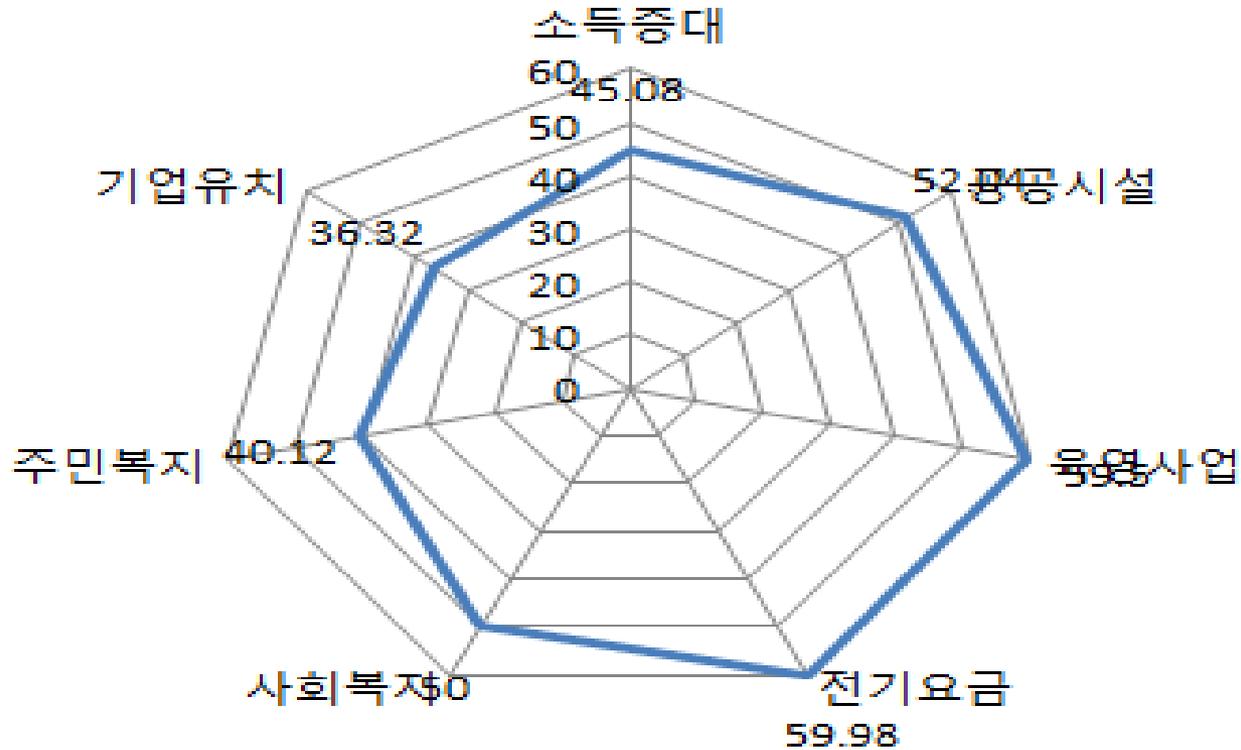
구분	내용
육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li> <li>- 기본지원사업비의 15/100~30/100</li> <li>- 장학금 지급대상 : 중학생 및 고등학생</li> <li>예외) ①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의 자녀</li> </ul>
전기요금보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량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li> <li>- 보조대상 :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용(아파트 종합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고객포함) 및 산업용전력고객</li> <li>- 시행대상 : 원자력발전소 또는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발전소</li> <li>- 지원한도 : 기본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주택용전력의 호당, 산업용전력 수급계약단위별 지원한도는 별도로 정함</li> </ul>

##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 관련 기존에 지적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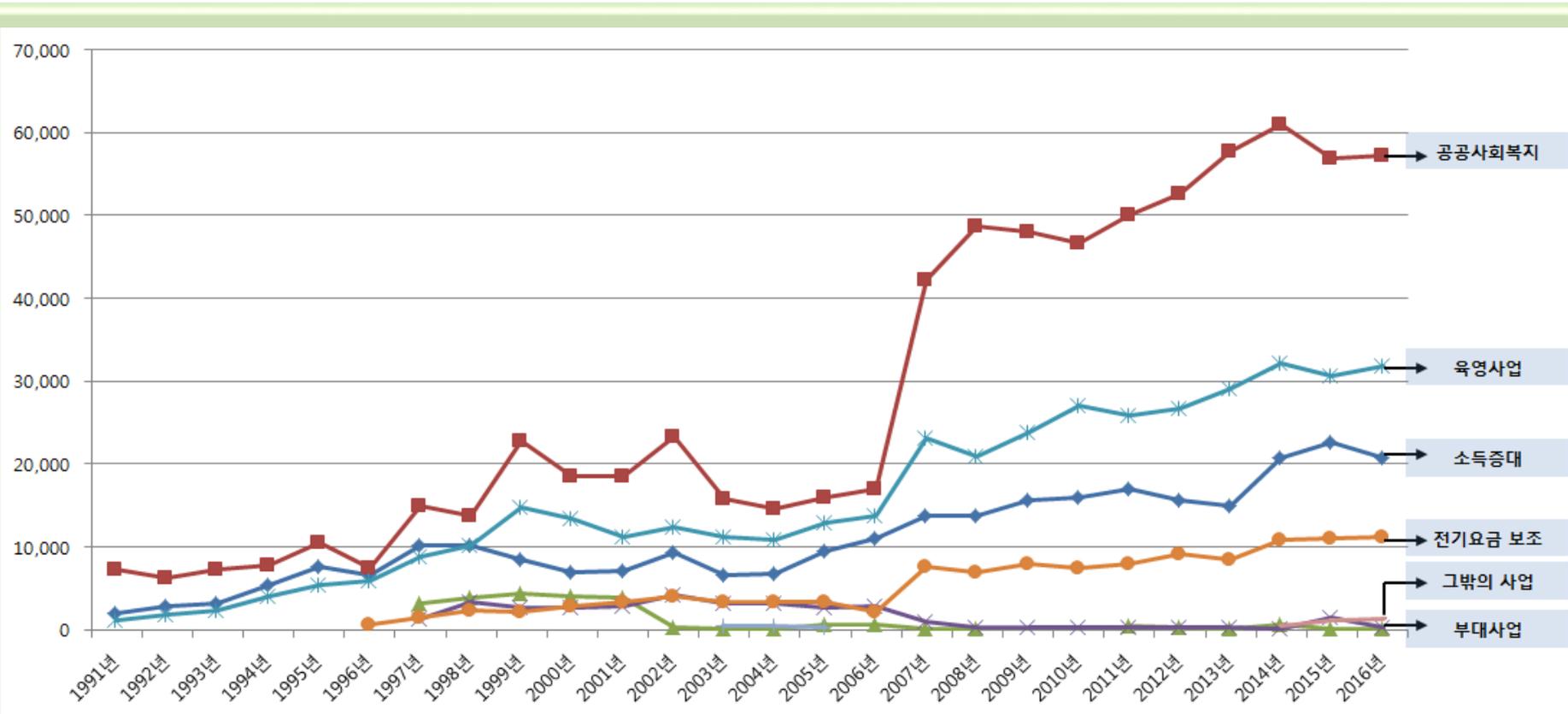
- 지원범위(5km)에 대한 논란 -> 범위 확대
- 장기적 지원으로 인한 한계효용체감의 문제 -> 종류별 지원기간 제한
- 간접지원 아이템의 고갈 문제 -> 일부 직접지원으로 전환
- 사업자지원사업, 기금지원사업, 지역자원시설세의 중복 문제 -> 통합

# 직접지원에 대한 주민의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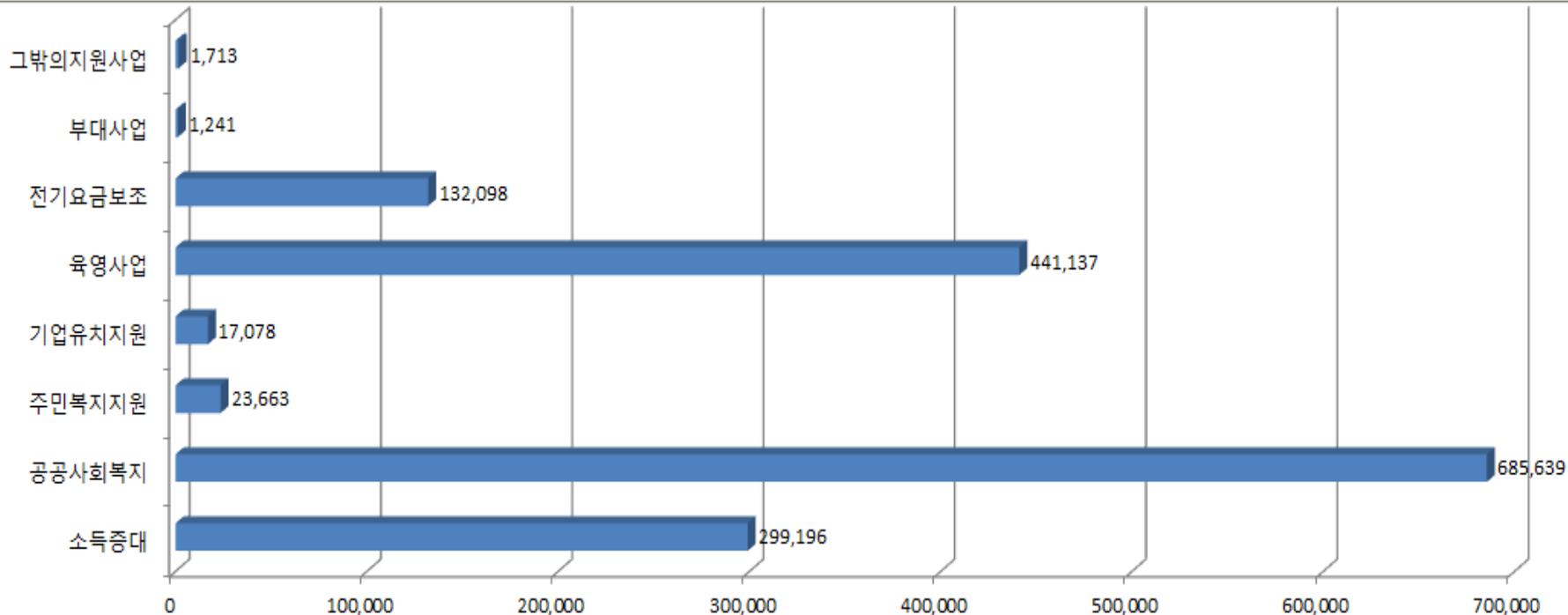
-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 것은 전기요금지원으로 약 60점으로 나타남.
- 육영사업으로 전기요금과 비슷한 수준인 59.5점을 나타냄.
- 기업유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주민복지, 소득증대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사업종류별 지원 추세 - 선호와 지원간의 괴리



- 공공사회복지의 경우 2005년에 큰 폭으로 향상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음.
- 육영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 약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현황(199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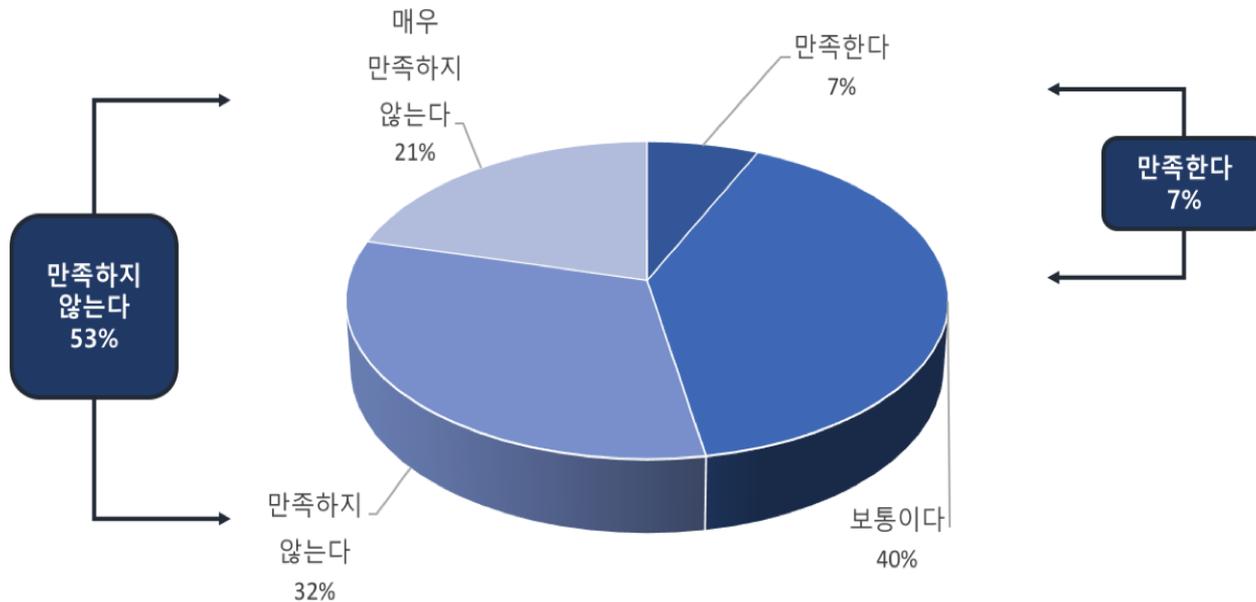
-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된 공공사회복지는 약 6,850억 정도가 지원됨.
- 육영사업은 약 4,400억, 소득증대는 약 3,000억, 전기요금보조는 약 1,320억 수준으로 지원됨.
- 그밖에 주민복지지원은 약 230억, 기업유치지원은 약 170억 수준으로 지원됨.
- 이외에는 10억 수준이 지원됨.

# 3. 주민의 인식 및 수요분석

## 주민의 평가 (설문지 배포 주민 400명 대상자 중 168명, 2020. 1월중 조사)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

-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 : 만족한다는 응답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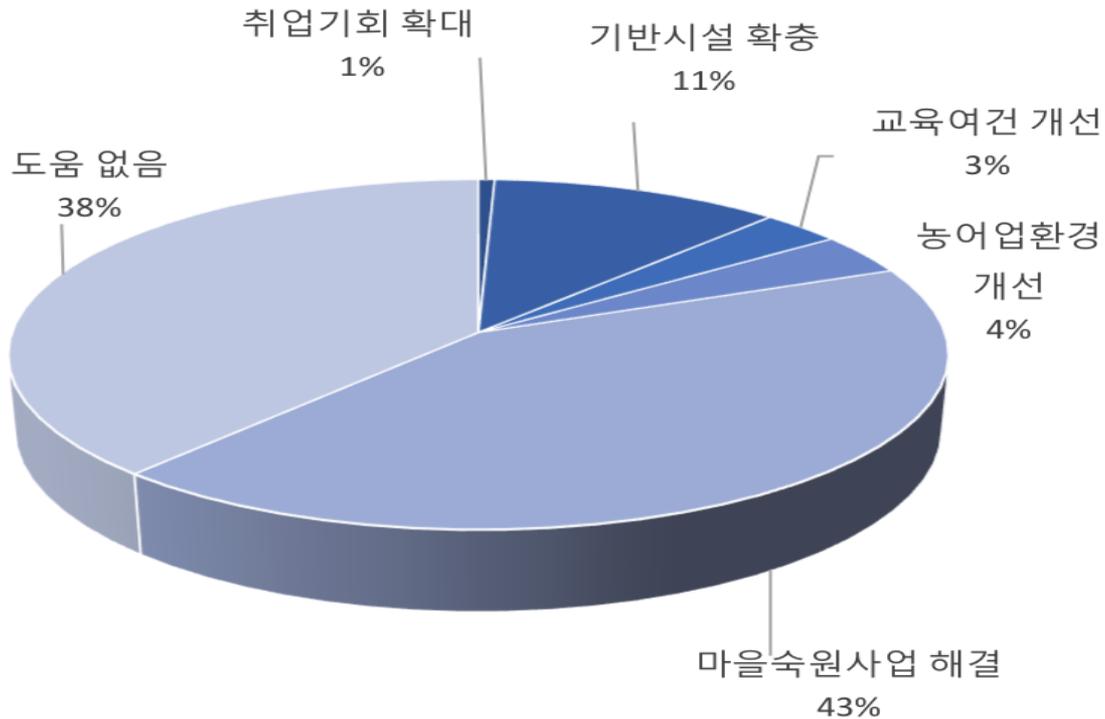


# 3. 주민의 인식 및 수요분석

## 주민의 평가(설문조사)

□ 발전소의 지역 혜택에 평가 : '도움 없음' 응답이 38.4%

<발전소로 인한 혜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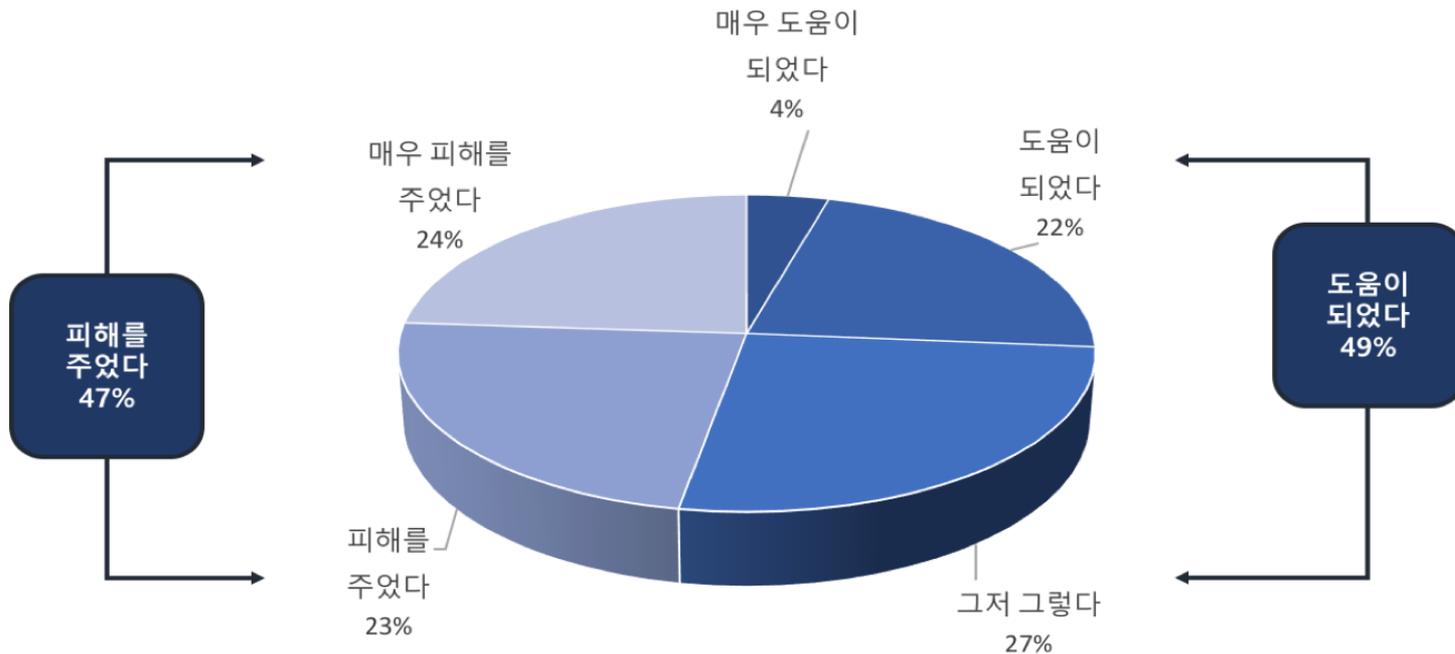


# 3. 주민의 인식 및 수요분석

## 주민의 평가(설문조사)

□ 발전소의 지역입지에 대한 평가 : 찬반양론이 비슷

<발전소의 지역입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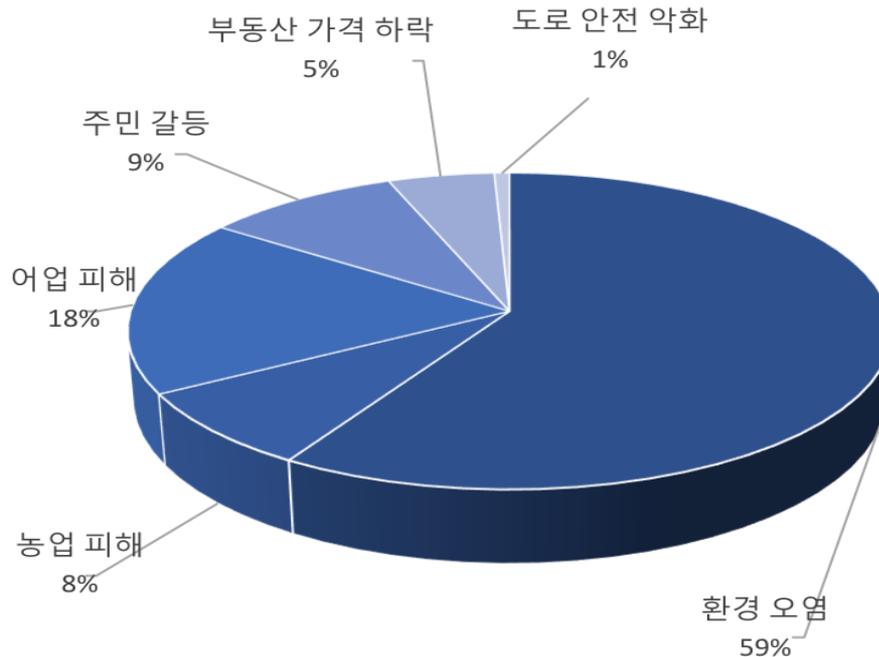


# 3. 주민의 인식 및 수요분석

## 주민의 평가(설문조사)

□ 발전소로 인한 피해내용 : 환경오염, 농어업피해가 압도적 다수

<발전소로 인한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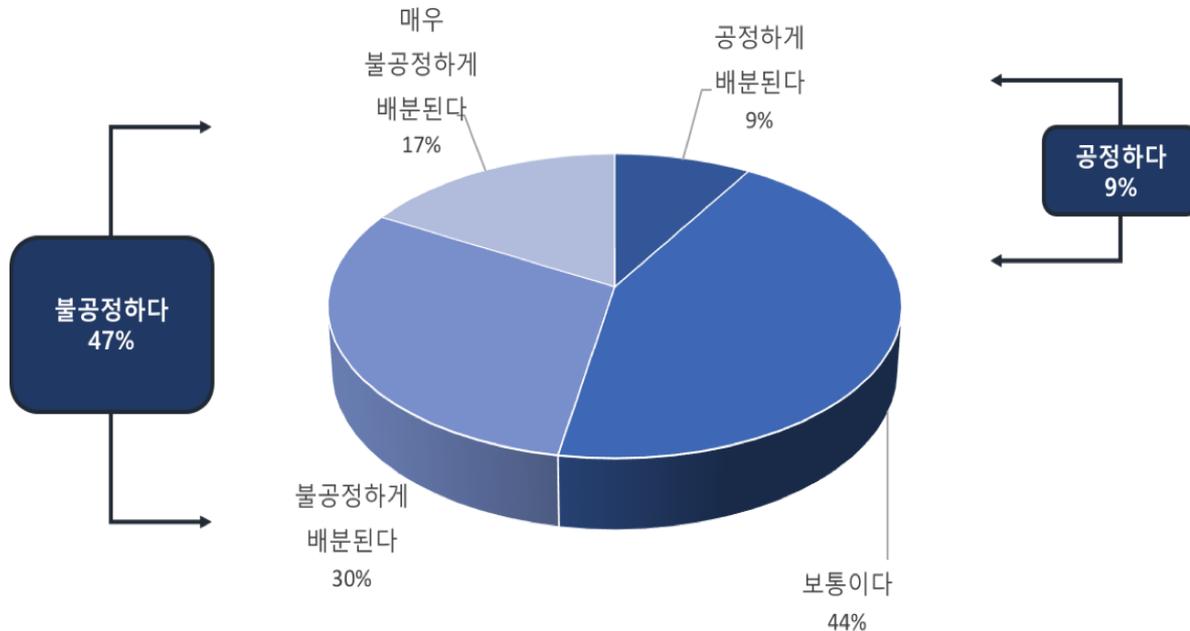


# 3. 주민의 인식 및 수요분석

## 주민의 평가(설문조사)

□ 주민 불만족의 이유 1 : 지원사업비 배분의 형평성

<마을간 지원사업비 배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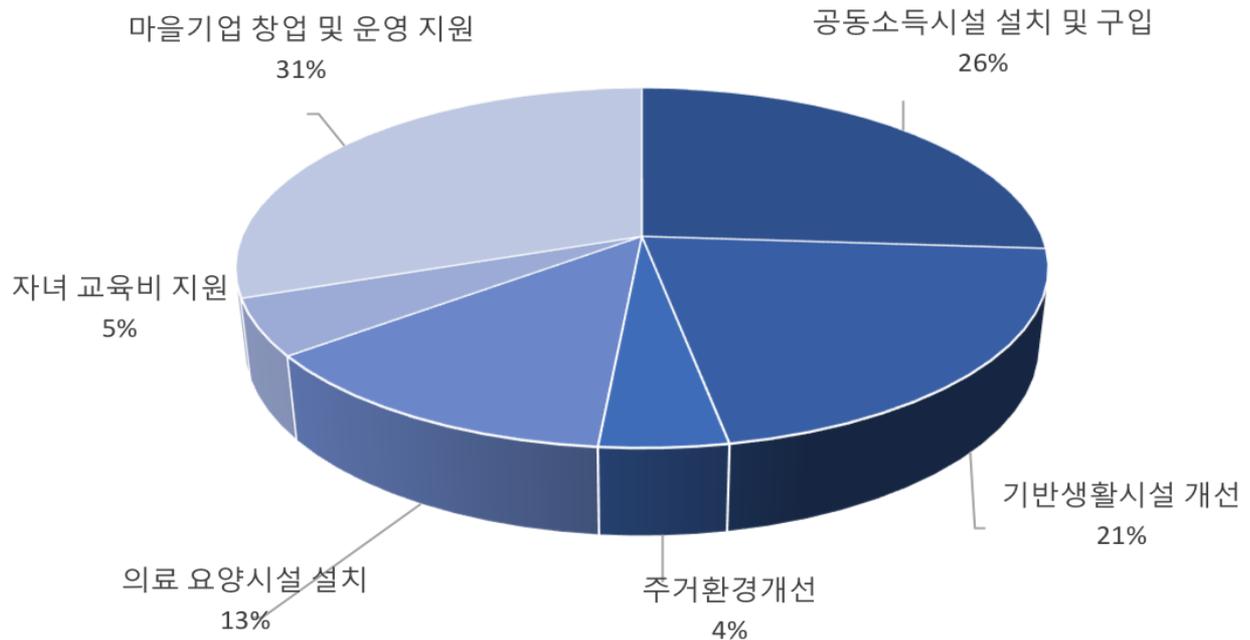


# 3. 주민의 인식 및 수요분석

## 주민의 평가(설문조사)

□ 주민 불만족의 이유 2 : 과거 소득사업 부진에 대한 불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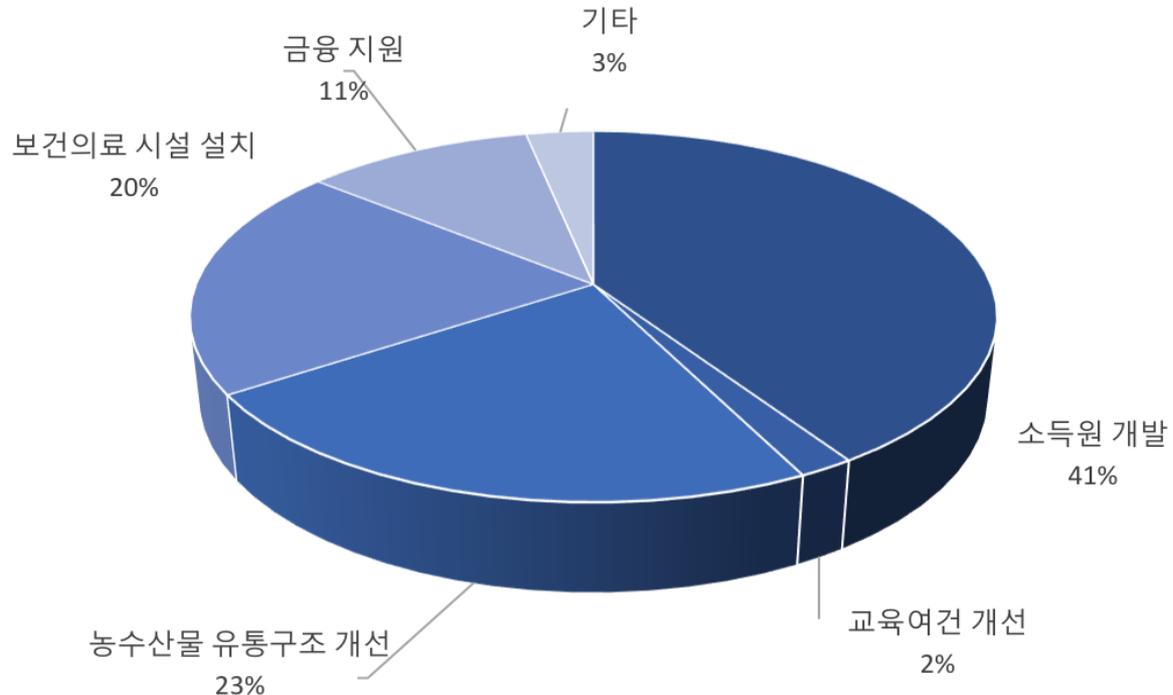


# 3. 주민의 인식 및 수요분석

## 주민의 지원 수요(설문조사)

### □ 소득원 개발과 보건의료시설 설치

<마을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



# 3. 주민의 인식 및 수요분석

## 설문조사 등에 나타난 주민 인식 및 특성

- 지속적 수익을 창출할 소득사업과 보건의료복지사업을 희망
- 과거 소득사업에 대한 불만과 불신
- 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
- 지원사업의 마을별 추진을 선호
- 지원비의 마을별 배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시행상)

## 1. 주민요구와 지원방법간의 괴리

- 주민은 직접지원을 원하나 제도는 간접지원 위주로 허용

지원제도의 목적은 발전소 입지로 인한 피해보상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활성화이나 지원수단은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접 현금공여를 불허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투자나 소득사업 시설 지원을 통한 간접지원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주민소득사업 지원만이 주민에게 현금을 배분하는 유일한 수단임

공공시설투자와 소득사업시설 지원은 그동안의 지원으로 충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더 이상의 투자는 낭비로 간주될 수 있음  
현 제도 하에서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민에게 배분하는 방안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원금을 사업에 투자하여 그로부터 창출된 수익금을 주민에게 직접 배분하는 것이 최선임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시행상)

## 2. 소득사업을 위한 주민 공동체 역량의 절대적 부족

- 소득사업에 필요한 역량은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등과 차원이 다름

마을공동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리더와 참여의식이 높은 주민, 제품 및 서비스 생산기술, 사업 투자재원의 3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함

- 헌신적 리더와 자발적 주민참여 역량이 소득사업의 선결조건

그간 주민들이 지원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여 왔으나 이를 책임지고 운영, 관리할 인적 자원이 없어 대부분의 사업이 실패로 귀결되었으며 그 이유는 헌신적인 리더와 주민 참여가 부족한 때문임  
(기술과 재원은 외부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함)

-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혹은 외부에서의 역량지원이 필요함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시행상)

## 3. 마을간 쪼개기식 지원의 문제점

- 당진시 주변지역의 경우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연간 총 40~5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되나 이를 33개 마을(리)에 배분하여 각각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은 개개 마을의 의사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약 20여년의 기간 동안 마을 단위에서의 지원 사업 아이템이 고갈되는 문제점이 노출됨
- 또한 각 마을에 배분되는 지원금 규모의 한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 마을 단위 일변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 단위를 읍, 면, 혹은 다수의 마을을 묶어서 설정하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시행상)

## 5. 단년도 사업기간으로 인한 부실 사업의 추진

- 현 지원제도 하에서는 지원금은 해당 연도에 모두 소진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음(1년 유예 가능)
- 주민에게 장기적, 지속적으로 혜택이 되는 사업은 통상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오로지 지원금 소진을 위한 즉흥적 사업들이 남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현재의 주민 역량으로는 매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금 사용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지원금 배정주기를 3~5년과 같이 장기로 할 필요가 있음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시행상)

기존 지원사업의 문제점		개선 방향
● 주민요구와 지원방법간의 괴리	⇒	● 주민소득사업을 통한 현금배분 효과 추구
● 주민공동체의 지원금 사용 역량과 책임의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의 발굴, 육성</li> <li>● 전담인력의 외부 충원</li> <li>● 지원사업단위의 확대</li> </ul>
● 마을간 쪼개기식 지원의 문제점	⇒	● 지원사업 단위를 읍, 면, 혹은 복수의 마을 등으로 다변화
● 단년도 사업기간으로 인한 부실사업의 추진	⇒	● 지원금 배정 주기를 현재 1년에서 5년 등으로 장기화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시행상)

## 개선방향

□ 사업방향 : 공공시설사업 → 소득증대사업, 보건의료복지

□ 사업주체 : 주민대표 →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 사업관리 : 관리, 점검 → 촉진, 육성

□ 사업주체의 태도 :

없는 것, 필요한 것 찾아내기 → 가진 것, 있는 것의 활용방안 찾아내기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시행상)

## 2020년 전국 주변지역 소득사업의 내용

- **농수산물 생산 지원**  
버섯재배사, 저장고, 유기질 비료, 공동농기계, 농기계 창고, 치어종묘 방류. 유실수 묘목
- **농산물 판매 지원**  
포장재 지원, 농산물판매장
- **부동산 임대 및 숙박사업**  
민박, 임대주택(제주 삼양동), 오토캠핑장(고성군), 원룸
- **마을가게 사업**  
커뮤니티 스토어, 마을카페
- **관광 경관 조성 사업**  
유채꽃밭 조성(울진), 매화나무거리 조성(울진), 공원화 사업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시행상)

## 2020년 전국 주변지역 소득사업

- **유통 사업**  
로컬 푸드마켓
- **농산물 가공**  
인진숙막걸리(경주 호동리 너범마을)
- **체험사업시설**  
떡만들기(화성시 장전리)
- **기타**  
축제개최, 태양광 설치, 종합사회복지관(안양시), 주민용자지원, 일자리정책박람회(과천)
- **특이 공공사회복지사업**  
마을공동급식사업(산청군 15개 마을), 대기오염전광판, 환경감시단, 목욕탕 운영

# ITEM NO. 1. 단체급식업 (단체급식자재 공급업)

사업 개요	제품(서비스)	다수의 인원에 대한 공동 식사 제공
	예상 고객	지역행사, 주민 연회(칠순잔치등), 공공기관 및 지역내 기업 급식, 각급 학교급식
	핵심 기술	대량 조리기술
	지역자원 활용	농수산물, 유휴노동력, 지원금, 지역토지, 건물
타당성 검토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농수산물 식재료의 저렴한 조달</li> <li>- 저렴한 유휴노동력을 주민 중에서 구할 수 있음</li> <li>- <b>주민의 음식조리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b></li> <li>- 공동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조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li> </ul>
	약점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없음</li> <li>- 방문 외지인에 대한 의존도가 없음</li> </ul>
	기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소 등 지역입주기업 직원을 안정적 고객으로 활용</li> <li>-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고객으로 활용</li> <li>- 장기적으로는 당진시 전체, 충남으로 사업 확장 가능</li> </ul>
	위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쟁자의 진입이나 트렌드 변화로 인한 사업 실패 위험이 없음</b> (식사 공급은 매일 소비가 창출됨)</li> </ul>
	타당도	매우 우수(☆☆☆☆☆)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녀주민 등 고용창출효과가 뛰어남</li> <li>- <b>100% 지역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지역경제 순환효과가 큼</b></li> <li>- 주민 기술 축적으로 향후 고급 외식사업 진출의 발판이 됨</li> </ul>	

## 2020년 제2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회의록

- 일시: 2020년 4월 17일(금) 14:00~16:00
- 장소: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
- 참석자: 안장현, 이인수, 황성렬, 유종준, 박기남, 신은미, 김정진, 박노찬, 안병일, 박혜규, 김가주, 여형범, 조재준(발표자), 홍성돈(서천사랑시민모임), 이정일(태안자치연구소)
- 정리: 여형범

### 1. 발표: 퍼포먼스웨이컨설팅 조재준 박사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10년 전력기반센터 주변지역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참여 경험 있음. 현재 당진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오랜 시행 이후 주민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찾기 어려워지고, 소규모 사업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발전소 폐쇄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에 지원사업이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5km 이내에 걸쳐 있는 읍면동에 지원함.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핵심임. 기본지원사업은 소득증대, 공공시설, 육영, 전기요금보조, 주민복지, 기업유치.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수용성 증진을 위해 도입됨. 홍보, 연구와 조사 사업도 포함됨. 사업자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는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다만, 사업자 지원사업의 내용이 기본지원사업과 겹치기도 함
- 기본지원사업은 지자체장과 사업자가 구분해서 진행함. 지자체장은 소득증대, 공공시설,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그 밖의 지원사업(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발전사업자는 현금지급 사업으로서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집행함.
- 역설적으로, 현금지급 사업은 지원사업의 주된 사업이 아닌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간접지원 사업은 주가 되어야함에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음.
- 현재 논의되는 개선 사항으로, 지원범위 확대(5km 이상), 종류별 지원 기간 제한 도입(특정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일몰 기한 도입), 간접지원 아이템이 고갈되면서 일부 직접지원으로 전환(간접지원 아이템에 대한 주민들의 기획력 한계를 극복), 사업자지원사업과 기금지원사업과 지역자원시설세의 통합 등이 제안되고 있음
- 주민들의 만족도와 달리, 실제 집행액은 공공사회복지 사업 지출이 가장 큼. 그 다음으로 육영사업과 소득증대사업 순임.
- 주변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높음.
- 발전소로 인한 혜택으로 마을숙원사업 해결(43%)이라는 대답이 가장 높았지만, 도움 없음도 38%로 나타남. 발전소 입지로 인한 지역발전 기여에 대해서는 50:50 정도임.
- 주민들은 과거 소득사업 부진에 대한 불만이 큼. 그럼에도 주민의 지원 수요는 소득원 개발과 보건의료시설 설치임. 결국, 소득사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임.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연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음. (지자체 채 담당부서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음)

- 전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다 비슷비슷함. 조금 다른 사업으로 오토캠핑장, 임대주택, 마을가게, 경관조성, 마을공동급식사업, 목욕탕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2. 토론

### ○ 지정 토론: 홍성돈 (서천사랑시민모임)

- 지역심의위원회가 중요함.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의 개선을 추진함.
- 서천군에서 신서천화력 특별지원금으로 320억원 정도 받음. 특별지원금은 지자체 단위(서천군)에서 사용함. 전국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70%를 사용하고 주변지역은 30%에 그치기도 함. 서천은 지자체 60%, 주변지역은 40%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 당시 서면 지역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에 모두 사용하고 싶었으나 서천군에서 반대. 충남연구원에 연구 의뢰하여, 서면 지역에 투자되는 192억원으로 사업을 구상했지만 추진이 쉽지 않음. 당시 태양광 사업도 검토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음. 결국 24개 마을별로 5억원 정도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함. 일부는 춘장대에 테마파크 시설물 설치함(65억원).
- 공동사업으로 소득사업을 하자고는 생각하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소득사업을 하지 못하게 됨. 또한 지원금 배분/사용과 관련하여 지역 내 마을 간 갈등을 가져옴.
- 마을별 5억원 씩 배분했으나 제대로 시행을 못 하고 있음. 지금 아이디어는 마을회관 건립, 주차장 건립 등 어차피 지자체가 해야할 사업들만 아이디어로 나옴.
- 기본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신서천화력으로 매년 11억원 정도 들어온다면, 그 돈을 마을별로 나누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 마을 이장의 쌈지돈처럼 사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음. 과거에는 농로 포장, 마을회관 교체 등 필요 없는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임.
- 이를 위해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서천군에 의견을 제시하여,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을 모두 바꾸었음. 그럼에도 대안 사업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음.
- 그래서 직접지급 방식을 요구함. 전기요금보조사업, 건강검진지원, 유선방송 수신료 등에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함(전체 금액의 64% 정도 사용함)
- 기본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사업이 너무 작다고 생각함. 지원금 규모가 작아서 배분하면 제대로 쓸 곳이 없음. 발전소 용량은 작더라도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비슷함. 특별히 더 고려해주는 것이 필요함.

### ○ 지정 토론: 이정일 (태안자치연구소)

- 당진이나 태안은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조용하지만 돈이 없어도 마을 공동체가 살아 있는 지역이,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공동체 붕괴. 작년에는 32억을 쓰지 못해서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음. 결국, 마을공동체 회복을 우선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마을공동체의 자치 역량으로만 원인을 돌리기는 어려움.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지역에 지원할 때의 문제점이 있음. 이미 7, 8호기 반대 투쟁에서, 9, 10호기 유치 경쟁까지... 지역사회 내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짐.
- 지원사업을 피해보상비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20년 지난 상황에서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었음. 이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지역 주민들은 지원금을 포기하기 싫어함.

-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컨설팅, 주민들에 대한 배려, 지자체와 군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것임. (행정이나 정치인은 이미 다 알고 있음)
- 주민들은 돈을 사용하기 위한 대안이 없다보니, 현금지급 방안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음. 태안은 유류오염 보상 관련해서도 갈등을 겪은 적이 있음
-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기획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함. 마을의 주민들과 합의하기가 쉽지 않음. 대화의 장을 어떻게 만들어볼까를 고민해야 함.
- 마을 주민들은 50% 정도의 금액은 태안군 전체에 사용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함. 대신 주변 지역 환경오염, 건강개선 등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함
- 태안군은 공기업과의 상생발전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함. 기업이라고는 서부발전밖에 없음. 발전소 입지 지역은 태안군에서도 매우 외진 지역임. 그동안 불편도, 혜택도 있었음. 무엇인가 만들어 가보자.

#### ○ 조재준 박사

- 지역사회 역량 강화 측면에서 지원금으로 마을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해봄. 박사급 연구원을 고용해서 지역의 미래를 조사·연구하는 방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재단...
- 또한 절대 망하지 않을 사업을 제안해 봄. 단체급식사업을 발전사업자와 협상해볼 필요.

#### ○ 이정일 소장

- 지역에서 '재단'을 만드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민해왔음.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지? --> (황성렬) 주변지역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활용해서 재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 ○ 황성렬

- 주변지역 지원금으로는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마을회관, 펜션, 목욕탕 짓는 것이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가?
- 주변지역 지원이 오래되면서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함. 피해를 자체를 막거나 줄여야한다는 생각을 못하게 됨
- 지역주민들은 직접 받기를 원하는데... 당진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함. 발전사업의 수익은 주민들에게 직접 나누어줄 수 있음.

#### ○ 이정일 소장

- 주변마을의 고령화 심함. 이미 많은 대안들을 찾아다녔음. 아이디어는 다 보고 다니지만, 직접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함.
- 재단이 있지 않으면, 지속성을 가지면서 의견을 모으고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안 됨. 주민들과의 신뢰 형성이 필수!!!

#### ○ 홍성돈

- 삼천포화력 주변 고성군.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음. 면 단위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 주민이 대표, 감사 등은 고성군 기획실장.... 이익은 면 단위에 배분.
- 태양광 사업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해서 검토 안 했음. 공공자금으로 태양광 설치하면 판매

가 안 된다는 검토... (그렇지 않다는 반론. 주민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금으로 발전사업 가능하다고... 당진, 태안에 사례 있다고...)

- 발전소별 지역심의위원회를 모아서 교육을 해야 함!!!!

#### ○ 박기남

- 마을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있느냐의 문제
- 고령화된 마을에 직접 사업을 수행하라고 하면, 집행이 불가능함
-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충족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행정과 의회의 역할일 것임.
- 이를 광역 차원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을까?
- 마을에서는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 시민단체가 개입하기가 매우 어려움. 꺼끄러움.
- 주변지역 지원금을 공적 자금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미래 세대까지 포함해야 하는...

#### ○ 박노찬

- 공동 대응의 틀을 만들면 좋겠음.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제안도 가능할 것임

#### ○ 김정진

- 주변지역 5km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함. 발전소가 없는 서산의 경우 인근 시·군에 설치된 발전소에 둘러싸여 있어서 피해가 집중됨. 과거 비산먼지나 온배수 등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던 대기오염 피해도 인식됨. 굴뚝 높이가 높아지면서 대기오염물질이 더 멀리 감.
- 보상으로 생각하니 어떻게 나눌까만 생각함. 피해를 저감하는 사업, 피해를 원상회복 시키는 활동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의료도 건강 피해를 회복하는 방안. 대형 화물차가 다니는 마을 도로도 위험함. 안전한 도로 확보 등...

#### ○ 이인수

- 앞으로 발전소 폐쇄하면, 이를 준비하는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장해주어야 함.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 ○ 유종준

-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보면, 결국 혜택은 다른 사람들이 봄. 건설업자, 중장비업자. 마을 주민들이 정말로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의문임.
- 제발, 그 지역의 환경 개선과 건강에 우선적으로 써야 함.
- 장기적으로, 기본소득...도 가능할 것임. 차라리 기본소득이 훨씬 효과가 클 것임.

#### ○ 안장현

- 중간지원조직 내지는 재단 설립 필요성이 있음. 지자체나 의회에서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함
- 지원사업은 우선적으로는 환경과 건강을 중심으로 지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주변지역 지원금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과 사업을 활용 또는 매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여형범 (미발표 의견)

- 질문. 당진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이 모든 사업들은 현재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속된다는 생각으로 진행되는 듯.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싶어 하는가?
- 질문. 지금은 6차산업,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셈. 주민들은 이것을 대안으로 생각하느냐. 주변지역 마을이 적합한 공간이냐?
- 질문. 그렇다면 누가 기획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가? 결과를 모니터링·평가하는가? 큰 그림은 누가 그리는가?
- 질문. 액수가 문제냐? 배분 방식이 문제냐? 아이디어가 문제냐? 사업 기획이나 경영 능력의 문제냐?
- 질문. 일 년 단위로 사용하기에는 액수가 적다면, 5년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5년 동안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을까? 적립할 경우 감액해서 하는 방안도 가능?
- 의견. 지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함. 하지만 지역이란 무엇인가? 발전소 주변지역 5km 내의 지역만 특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는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안으로 지역발전협약... 등의 형태를 고민해보면 좋겠음. 주민 개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마을을 살기 좋게 바꾸는 방법으로...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은 어떨까? 에코뮤지엄 조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마을, 읍면동 바깥의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
- 예를 들어, 에코뮤지엄을 생각해보자. 강원도 폐광지역이 20년이 지나면서 지역발전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매력점을 만들고,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이 과정을 주민들이 살아가는 현장과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 충남도 연구용역(정의로운 전환) 연구 과정에서, 충남연구원은 10년, 20년 후에 이 지역을 산업유산 에코뮤지엄으로 만드는 것도 대안 사업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싶다.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원은 10년, 20년에 걸친 준비 작업 자체가 지역에 소득을 만들어내고 청년을 끌어들이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트윈’을 통한 가상적으로 폐 발전소 산업유산 복원, 주변지역 생태·문화 복원을 설계해보자. 설계를 지역 내 학생과 주민, 사회적경제 등 대안경제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주체나 에너지 신산업 벤처(에너지정보센터, 가상발전소 센터, 기상정보 제공 등)와 함께 만들어보자.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아가는 것.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대/박물관을 미리 만들어보는 것이다.

3. 3차 포럼 계획

○ 일시: 2020년 5월 마지막주

○ 장소: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잠정)

○ 주제

- 제안 1: LNG 발전은 석탄화력발전의 대안인가? (기후솔루션에 발제자 문의)
- 제안 2: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중간지원조직과의 대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 문의)